

대형호텔·호화 유람선 전남 관광 확 달라진다

규제 풀리는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서도 까다로운 규제에 묶여 개발이 뒤쳐져왔던 전남 남해안 지역에 대형 숙박시설과 유람선 등 대규모 관광·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동시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유증형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연공원 및 수자원보호구역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이들 구역에는 숙박시설 설치 금지되거나 크

게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구역 내 관광지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높이 제한을 비롯 숙박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형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또, 여수와 목포 등 관광거점지역에는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유선장 설치 허용 한도를 현재 3천250㎡에서 1만5천㎡로 늘리기로 했으며, 공원구역에 해양관광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수상레저기구계류장과 해중관찰대 등을 공원시설에 추가하고 전망대 부지면적과 높이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거리 제한 역시 현재 2km인 것을 5km까지 확대하며, 소규모 공원시설을 신설·확대하는 경우 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자연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을 현행 5천㎡ 이상에서 7천500㎡ 이상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기준도 조

정,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육지) 또는 100m 이내(도서) 지역이라도 수산자원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투자유치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투자유치 및 활성화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남해안 전체에 약 1조8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남해안은 수려한 관광자원을 갖추고서도 지나친 규제에 발이 묶여 투자유치는 물론 소규모 관광지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교통선진문화 만듭시다”
이팅을 외치고 있다.

30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고에서 열린 '교통선진문화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 박영렬 광주지검장,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김남성 광주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내빈들이 교통문화 개선을 다짐하는 파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부 SOC 예산 빼내 '4대강 살리기' 전남 국도건설 예산 71% 깎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부 재원이 집중 투입되면서 전남지역 내년도 국도 건설 사업 예산의 71%가 삭감되는 등 '제앙'에 가까운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전남도의 접근성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12년까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제시한 '2010년 도로건설 국고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도로건설예산은 전년 대비 54%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2009년 대비 30%가 삭감된 3조9천415억원을 내년도 도로 건설 예산안으로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는 1차 심의를 통해 34%를 추가 삭감한 2조5천967억 원만을 배정, 내년도 도로 건설 사업은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전남도의 내년도 국도 건설 예산은 요구액에 비해 무려 71%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남지역 47건의 국도 건설 사업과 관련, 내년 예산으로 8천633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토부에서는 45%를 삭감한 4천738억 원만을 반영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국토부

가 제출한 전남지역 국도 건설 예산안의 47%를 추가로 삭감, 2천520억원을 배정했다. 이 같은 예산안은 올해 전남 지역 국도 건설 예산 6천179억 원의 4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올해 목표~광양 고속도로 예산으로 2천275억 원을 신청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절반 이상 삭감한 1천125억 원만 배정했으며 전주~광양 고속도로도 당초 요구액 2천944억 원의 28%에 불과한 848억 원만 반영했다.

이 같은 국토해양부의 예산안도 기

획재정부에서 추가로 더 삭감될 가능성이 높을 상황이며 내년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 건설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도로 건설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재원 6조7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남도는 철도에 이어 국도 건설까지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교통문화 운동 전국 확산 시키겠다” 광주 방문 김경한 법무

“빛고을” 광주에서 비롯된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이 전국 시·도로 확산된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0일 “광주에서 시작된 교통문화 운동이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냈다는 사실을 전국 지방경찰청에 알렸다”며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인터뷰 7면>

김 장관은 이날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민과 단체가 총망라된 교통문화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안순일 광주시 교육감, 김남성 광주지방경찰청장,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등 주요 기관장 및 지역 원로 등이 참석했다.

이어 김 장관은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내 대창운수에서 열린 ‘바른 운전 결의대회’와 첨단고에서 열린 시민운동본부와 광주시교육청 간 ‘교통선진문화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등에 참석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는 이날 보성군 소리전수관에서 ‘보성군 교통사고 제로(Zero)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지역 내 교통의식 개선 운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어선 1척 NLL 넘어 北에 예인

우리 측 어선 한척이 30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인됐다.

통일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선원 4명이 탑승한 29급 오징어 채낚기 어선 '800 연안호'(선장 박모씨·거진 선적)가 오전 6시27분경 강원도 거진 동북쪽 20마일 상의 동해 NLL을 7마일가량 넘어 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으로 넘어간 어선은 전남 오후 1시30분 강원도 거진항을 출항해 레이더 탐지 밖의 동해 만바다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다가 항로를 이탈, 북한 수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잠정항쪽으로 예인되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현재 해 당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대학 학자금 대출, 취업 후 갚는다

등록금 전액 대출도 가능...내년부터 시행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겼을 때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에 본격 도입된다. <관련기사 3면>

또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던 기존 등록금 전액 대출을 빌릴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

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 붙인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

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가정은 기존의 대출 방식을 적용받는다. 새 제도는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보청기의 지존성
세기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1588-8419 / 062-222-0100